한나라 "서민 피부 와 닿는 일 하겠다"
민주당 "친서민 정책 운운은 코미디"

■ 7·28 재보선 D-7

안상수 "2~3곳만이라도 이기게 도와 달라"
민주 국회의원-민노 지도부 남구서 총력전

7·28 재·보선 선거전이 중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한나라당은 민생 행보를 통해 '지역 일꾼론' 확산에 나서는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쟁점화와 정권심판론을 통해 표심을 파고 들었다.

◇한 '지역일꾼론' 민주 '정권심판론'=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20일 원내교섭단체 대표 라디오연설을 통해 서민경제 회복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새 지도부의 역점과제로 제시하면서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 서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과 정부가 지금보다 더 힘이 빠진다면 대한민국은 방향을 잃을 수도 있다"면서 "일주일 뒤에 치러지는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2~3곳만이라도 승리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호재로 삼아 여권의 친서민 행보를 집중 공격하는 등 여권의 민생론이 선거에 미칠 영향력 차단에 나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보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서민정책을 옷장 속에 깊이 넣어뒀다가 다시 꺼내들고 있다"며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한나라당 대표가 서민정책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코미디 아닌가"라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정세균 대표 등 지도부와 손학규 전 대표와 정동영·김근태·한명숙 상임고문을 접전지역에 투입, 거당적 유세전을 전개했다.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 안 대표의 취임 후 첫 라디오연설에서 "2~3군데만이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국민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부분을 "선거법 위반"이라며 비판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의석이 부족해 서너 석을 달라고 애걸하는 당 대표의 연설은 그 자체로 선거법 위반"이라며 "구걸인지 애걸인지 듣는 사람은 민망하다"고 말했다.

◇광주 남구 유세전 가열=민주당은 20일 광주는 물론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 장병완 후보 지원 유세를 벌였고, 민노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소속 정치인들은 단일후보인 민노당 오병윤 후보를 지원하는 등 세 확산에 주력했다.

민주당 이낙연·김효석 의원은 이날 남구 재래시장과 상가, 복지관 등을 잇따라 찾아 "민주당이 욕심내온 최고의 예산전문가를 놓치면 광주뿐 아니라 민주당의 손실"이라며 "이번 선거는 남구가 잘 사는 희망의 도시가 될 것인지, 투쟁의 도시가 될 것인지 판가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16일 남구를 방문했던 박지원 원내대표도 오는 22일부터 1박2일간 남구에 머무르며 장 후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맞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와 민노당 권영길, 홍희덕 의원은 이날 남구를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오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민노당 이정희 대표와 강기갑 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번 주말께 남구를 방문해 선거일까지 지역별로 나눠 선거운동을 벌이는 등 당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민주노동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광주 남구를 7·28 재보선 전략지역으로 결정하고, 모든 당력을 총 집중하여 반드시 당선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참여당 정찬용, 진보신당 윤난실, 민노당 장원섭 전 광주시장 후보도 조만간 남구에서 공동유세를 하기로 했다.

/박지경·최권일기자 jkpark@

20일 오전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에 교육의원 5명이 불참해 좌석이 텅빈 채 열렸다. 교육의원들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과 간사를 독식한데 항의해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의회 교육의원 업무보고 불참 파행

교육현장 방문을 거부했던 전남도의회 교육의원들이 20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도교육청 업무보고에 불참해 교육위 파행 운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도의회 교육위는 이날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도교육청 간부와 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주요 업무와 사업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그러나 9명의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의 도의원만 참석했다. 나머지 교육의원 5명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간사 독식과 상임위 일정 미협의 등을 이유로 사실상 회의 참여를 거부했다. 전날 교육 현장 방문을 보이콧한데 이어 또다시 상임위 참여를 거부한 것이다. 상임위는 재적의원 9명 중 3분의 1만 참석하면 열릴 수는 있지만 안건 의결은 불가능하다.

특히 5명의 교육의원들은 21일로 예정된 전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심의·의결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도의회 교육위 파행운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흥빈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의 권한에 따라 상임위에 참여하는 의원들과 함께 원칙대로 소신껏 상임위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野 '후보 단일화' 협상 재개

민주 '여론조사'… 타당은 '일괄 협상' 주장

7·28 재보선을 8일 앞두고 야권은 '후보 단일화 협상'을 재개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은 20일 오후 한동안 중단됐던 실무 협상 을 다시 갖고 접점 찾기를 시도했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 은평을에서 후보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고 야권 지지층이 결집해 반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권이 분열해서 맥없이 패배할 것이냐, 후보 단일화로 승리할 것이냐의 갈림길"이라며 이번에 양보한 정당은 다음 재보선에서 보상받도록 하겠다고 적극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여전히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른 두 당은 '일괄 정치협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정 대표의 발언은 일시 어려움을 비켜가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6·2 지방선거 야권연대 과정에서 가장 충실했던 측을 배려하는 정신을 이번에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참여당 천호선 후보 캠프의 유시민 선거대책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아무 논의도 않고 거부하다가 선거가 임박해 자기당 후보가 당선되기 어려울 것 같으니 이제와 논의에 응하는 것은 야권 맏형답지 못하다"고 각을 세웠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 사무총장 원희룡
민노당 사무총장 장원섭

원희룡 사무총장

장원섭 사무총장

한나라당은 신임 사무총장에 3선의 원희룡(46·서울 양천갑) 의원을 내정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원 의원은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34회)한 뒤 서울지검, 부산지검 등에서 검사생활을 했다.

민주노동당도 20일 신임 사무총장에 장원섭(44) 4기 최고위원을 내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정가 라운지

광주시의회 예결특위 등 3개 특위 구성

광주시의회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문화수도특별위원회, 4대 강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등 3개의 특위를 구성했다. 예결특위 위원장에는 김영우 의원(민주·동구 1), 문화수도특위 위원장에는 손재홍 의원(민주·동구 2), 4대 강 특위 위원장에는 조오섭 의원(민주·북구 2)을 각각 선임했다.

김영우 위원장

손재홍 위원장

조오섭 위원장

김영우 예결위 위원장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에 들어간다"며 "내년도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예산을 철저히 심의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재홍 문화수도 특위 위원장은 "문화수도 조성과정에서 시민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돼 문화로 광주경제가 활성화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아시아문화전당의 조속한 완공과 CT연구원 유치 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오섭 4대 강 특위 위원장은 "영산강살리기 사업으로 추진되는 광주지역의 주요 사업들을 조사하고 점검해서 4대강 사업에 대처할 것"이라며 "사안별로 전남도의회와 연계해 위원회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4대강 반대·상품거래소 설립 촉구

광주시의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영산강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중단과 상품거래소 광주설립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각각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대다수 국민은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광주에 상품거래소 설립을 공약했다"며 "정부가 임기 내에 광주에 상품거래소를 설립함으로써 열악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간 균형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남지하상가 붕괴 보상을"

광주시의회 김영우 의원(동구 1)은 20일 광주시의회 제1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금남지하상가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피해상가들에 대한 보상문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직접적 피해를 본 12개 상가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